

#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 VII. 동반성장 모델의 정립을 위한 과제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일시] 2011. 09. 27 (火) 14:00~16:0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 A룸

<사회>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발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 헤럴드경제 정책세미나 - 2011년 9월 진행(案)

1. 시 기 : 9월 27일(화) 오후 2:00 ~ 4:00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콘퍼런스 A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3. 大주제: **성숙한 세계국가 도약을 위한 9대 전략**  
 小주제: **⑦ 동반성장 모델의 정립을 위한 과제**

###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例示)	발표자
주제 1	10분	- <b>동반성장, 왜 중요한가?</b>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 .한국에서 '히든챔피언'이 잘 안 나오는 이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정재찬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주제 2	10분	- <b>동반성장의 바람직한 모델</b> .최근 동반성장 관련 논쟁에 대한 평가 .국가경쟁력, 고용, 성장에 기여하는 동반성장 모델 .대중소기업이 함께 윈윈하는 동반성장 모델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최승희 이사장 (경기개발연구원)
주제 3	10분	- <b>동반성장의 철학, 정책, 기업의 대응과 미래 발전방향</b> .우리나라에서 동반성장이 어려운 이유 .동반성장의 국내외 성공 사례 .바람직한 동반성장 모델과 향후 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주십시오.	과수근 교수 (서울대/ 한국경영학회 회장)
종합토론			사회 : 김주현(HRI) 원장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 1. 동반성장, 왜 중요한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I.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왜 필요한가?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전 세계적 추세로 일자리창출,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 정부는 지난해 「9.29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혁신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1.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조건

#####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Backbone)

○ 중소기업의 사업자 수는 306만개로 전체의 99.9%, 고용은 1,175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

\* 중소기업 종사자수 : (98) 767만명 → (09) 1,175만명, 408만명 증가

\* 대기업 종사자수 : (98) 220만명 → (09) 164만명, 56만명 감소

○ 반면, 우리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심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기업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

\* '97~'07년간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에 불과

⇒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토대마련 필요

#### 2. 경쟁 패러다임의 변모 : 단일 기업간 경쟁 →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

□ 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의 복잡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경쟁 양상이 단일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전환

○ 기업 네트워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진정한 신뢰 구축이 필요

#### 3.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는 소세계적 추세

□ 주요 선진국들도 경쟁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기반 마련과 중소기업의 창의성·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 \* (미국)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상생프로그램) 발족, (EU)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독일) 히든 챔피언 육성, (일본) 경쟁정책형 중소기업 정책 추진

## II. 9.29 종합대책 1년의 성과 조명

- ◇ 9.29 동반성장대책은 “공정한 시장의 룰(rule)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문화를 조성”하는 구체적 실천전략
- ◇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1)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2)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3)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

### 1.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충

#### 1) 하도급법 및 하위 규정 정비

-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감액의 입증책임 전환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 (3.29 하도급법 공포, 6.30 시행)
-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절차, 감액·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사항, 즉시 조정개시(Fast Track)요건 등도 마련 (6.30시행)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심사지침(6.30),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7.6),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8.16) 등 하위 규정도 정비

#### 2)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추진

- 납품거래 공정화 입법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안,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제정 추진 중('11.9현재 국회 법사위 상정)
- 납품업체도 불공정관행 근절수단으로 관련 법 제정을 1순위로 꼽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중기중앙회 설문, '08년 46%, '10년 47%)

- (제정안 주요내용)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행위의 정당성을 유통업체가 입증(배타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요구 제외)토록 입증책임 분배

\*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배타조건부 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

- 서면계약 추정제도,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40 일), 판촉비용 분담기준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협의회 등 중소기업보호 규정도 마련

### 3) 표준(하도급·유통)계약서 등 선진적 모범계약 관행 보급 확대

- (표준하도급계약서)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공정한 경쟁기반 확충을 위해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11.1 이후 8개 업종\*의 계약서 개정 등 총 25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 중

\* 방송업, 전시행사업, 화물운송업, 디자인업,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 (표준유통거래계약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신규 계약부터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하여 선진적 계약문화 선도

\* 백화점, TV홈쇼핑('10.12월) 및 대형마트('11.6월)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既제정하여 보급 중이며 편의점 분야는 '11.10월 중 제정·보급 예정

## 2. 동반성장 문화 확산

### 1) 공정거래협약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조성, 정착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유도

- 금년 3.29 현대차 그룹 6개사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동반성장지수 대상 56개 대기업”의 협약체결 완료

- '07.9.13 동반성장협약 제도 도입 이후 181개 대기업이(재협약 포함시 261개사)가 74,669개 협력사와 협약 체결

\* 하도급 : 162개사(재협약 포함시 236개사), 유통 : 19개사(재협약 포함시 23개사)

< 동반성장협약 체결 현황 >

(단위: 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9.5까지		계	
신규	재협약등	신규	재협약등	신규	재협약등	신규	재협약등	신규	재협약등	신규	재협약등
11	-	65	3	51 (10)	-	38 (8)	36 (2)	16 (1)	41 (2)	181 (19)	80 (4)

\* 괄호는 유통분야 동반성장협약 실적

- '11년 상반기 LG이노텍·현대건설 등 21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실시 결과 6사가 양호 이상 평가(1사 우수, 5사 양호)

\* 특히 내년 상반기 중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 대한 협약평가 실시 예정

2) 유통시장 납품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적 동반성장 추진

- 판매수수료를 인하, 불공정 납품관행 근절 등 중소납품업체가 실제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11.9.6 유통업계CEO간담회)
  - 대형유통업체들은 합의 내용을 입점·납품업체와의 동반성장협약에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2011. 9. 6 대형유통업체 CEO 주요 합의사항>

- 1]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키로 자율적 합의
  - 인하시기는 '11.10월, 인하 폭·대상업체 등은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
- 2] 신규 중소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현재 1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 보장 및 시장 연착륙 지원('11.10월~)
- 3] 2012년을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 미교부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으로 자율선언

3) 대·중소기업간 소통(Skinship)강화 등 동반성장 촉진자로서 역할 확대

- 중소기업 현장방문·간담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 \* (3월) 구로·청주·광주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4월) 중기중앙회, 업종별 조합대표 등과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개최  
(5월) 부산·대구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전경련, 중기중앙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 워크숍 개최
- 동반성장이 대기업의 문화로 체화되도록 주요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CEO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
- \* (2월) 9개 유통업체(2.9), 10개 건설업체(2.10), 15대 대기업(2.11)  
(7월~9월) 11개 대형유통업체 CEO 간담회 등

### 3. 시장감시 강화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1) 하도급·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내실화

-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해소, 상시감시체계 마련 및 범위반 자율시정 유도 등을 위하여 서면실태조사 지속 확대
- (하도급)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제조업 총 6만개 기업에 대해 서면조사(원사업자 3,000개, 수급사업자 57,000개) 실시('11.6~9)
  - \* (중전) 제조·건설·용역업을 함께 조사 → (개선) '11년부터 업종별 심층 조사 등을 위해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분리, 격년제로 순환 조사
- (유통)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해 12개 대규모소매업자 및 1,683개 납품업체에 대해 서면조사 실시

#### 2) 불공정거래(하도급·가맹·유통분야) 직권조사 강화

- 정책·약정CR(Cost Reduction) 등 부당한 대금 결정 및 유통·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실시 및 상습 법 위반업체 현장조사 강화
- \* 하도급 : 전자·기계 등 7개 업종('10.9.28~12.24), 자동차 업종('11.6.7~6.17)
- \*\* 유통·가맹 : 유통분야('10.12.27~'11.3.11), 40개 가맹본부('10.9.30~10.27, '11.6.27~7.15)
-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 전개 (저인망식 현장조사 지양)

### 3)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11년부터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공표하여 사회적 평판(Reputation)에 의한 거래관행 개선 유도(하도급법 개정, '10.7.26)
  - 20개 상습업체를 선정,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4.28~)

### 4)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 대형유통업체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수료율 범위 등 수수료 수준을 종합하여 공개 (금년 6월 1차 공개)
  - 대형유통업체 외에 납품업체도 조사하여 수수료 수준에 대한 보다 유의성 높은 정밀 분석 실시

## III. 향후 동반성장 정책 보완·개선 과제

- ◇ 하도급법 등 제도적 인프라와 조사권한 등 집행 수단을 함께 보유한 공정위 역할에 대해 국회, 언론 등 사회적 기대가 높음
  - 최근 하도급법 개정, 관련 조직 확대 등으로 핵심적인 불공정 관행 시정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
  -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조치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 정책 전개

### 1. 구두발주·부당단가결정·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거래 시정

- 하도급법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구두발주, 부당 단가결정,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 근절에 집중
  - 처리 건수의 88%이상을 차지하던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사건처리를 최대한 신속·간소화하여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상대적으로 처리 건수가 적었던 구두발주·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처



### 1) 구두발주 관행 개선

- 관행적인 구두발주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상습성을 감안하여 「직권조사 강화」와 「정책적 계도」의 “투트랙 전략” 수립
  - (직권조사 강화) 서면실태조사(9월 마감) 결과, 상습·고의적 서면미교부 업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직권조사 대상에 우선 포함
  - (정책계도 대상) 비상습·비고의적 업체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협조요청 등 연성적 계도 노력 전개
- \* 이와 함께 “바람직한 서면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여 선진적 계약·서면교부 문화의 정착을 유도

### 2) 부당 단가결정 근절

- 과거 법 위반사례, 원재료 가격 변동, 정기·수시CR(Cost Reduction) 제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주요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특히,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감액에 대해서는 서면교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법 집행 도모

### 3) 기술탈취 행위 엄정 대처

- 기술탈취 빈발 산업·업종, 구체적 위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사례·제보 수집 등 정밀 모니터링 진행
  -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업종이나 구체적인 제보가 확보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 착수

## 2. 동반성장협약의 수직·수평적 확산과 내실화 병행 추진

- (문제점) 협약체결 기업이 기간(1년) 경과 후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 \* 협약이행 181개사의 협약 재체결율이 42.7%에 불과, 1회성 협약이라는 비판
  - 특히, 협약이행 우수기업들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무늬만 동반성장’ 한다는 비판 제기

## 1. 동반성장, 왜 중요한가?

- \* 협약에서 요구하는 금융·기술·교육 등 지원 요건은 갖추면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거나 수수료를 올리는 위법행위를 지속
- (보완 방향) ①동반성장협약 체결대상을 수직·수평적으로 확대, ②협약의 효과가 구체화되도록 협약 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 대·중소기업간 지속적 공생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
- ① (협약체결 확대) 동반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재협약·신규협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약체결 확대(상시)
  - (신규협약)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대상 협약체결 유도
  - (재협약) 업종별·기업집단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약체결 독려
- ② (협약평가기준 등 제도개선) 동반성장협약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 기존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내용 등이 협약 평가에 추가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보완

### < 협약평가기준 개선방안 >

현 행		개선 방안
충실도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반영 정도 : 3점</li> <li>· 자금 지원 : 7점</li> <li>· 현금성 대금지원 개선 : 5점</li> <li>· 대금지급기일 단축 : 5점</li> <li>· 기술 지원 : 4점</li> <li>· 교육훈련 : 3점</li> <li>· 기타 지원 : 3점</li> <li>· 수급사업자의 협력사 지원 계획 : 5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 평가 ; 비중 축소</li> <li>· 납품단가 및 판매수수료 조정 ; 평가 기준에 반영</li> </ul>
이행도 (6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대 가이드라인 등 이행 : 15점</li> <li>· 지원 이행 : 40점</li> <li>· 수급사업자의 협력사 지원 이행 : 10점</li> </ul>	

주) 개선된 평가기준은 2012년에 체결되는 협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011년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는 현행 협약 평가기준을 적용

## 2. 동반성장의 바람직한 모델

좌 승 희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 I. 무엇이 동반발전을 어렵게 하나?<sup>1)</sup>

#### 1. 동반발전이 안된다는 양극화 현상은 인재(人災)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네트워크 경제이다.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한다는 명제를 피할 수 없다. 네트워크를 통해 끝없이 발전의 노하우와 시너지가 서로 공유되어 퍼져나간다. 내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이 많을수록 나의 성공가능성은 커지며, 역으로 성공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성공할 길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네트워크 자본주의경제는 칼 마르크스적인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라 성공노하우의 공유를 통한 동반발전의 장이다. 수양산의 그늘, 흥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들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서로 무임승차를 통해 퍼져나간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본질상 동반발전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실제 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차이는 바로 그 사회의 경제제도나 정책이 경제주체들끼리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의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동반성장을 막아 소위 양극화를 조장하는 경우는, 우선 흥하는 이웃, 수양산의 등장을 원활히 도와주지 않아 아예 수원지가 고갈되거나, 혹은 수원지에 댐을 쌓아 수문을 닫아놓거나, 아니면 물이 넘쳐흐르지만 손수 물을 길어 올릴 생각을 안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모두가 원인일 수 있다. 어떠한 제도가 이런 문제를 초래할까? 시장의 자생적인 동반발전성향을 여러 가지 이념적 이유로, 즉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계급 투쟁적 이념에 빠져,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취약한 계층이라고 무조건 도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는 경제제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인 것이다.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지난 50여 년의 역사와 지난 30여 년의 우리의 경

1)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2011, 서울대 출판부 출간예정)에서 전제

제정책 역사가 이를 응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취약계층을 위한다거나 양극화를 완화한다거나, 동반발전을 이끈다거나 하는 좋은 뜻으로 도입한 정책들이지만 결국 자본주의 동반발전원리에 역행하여 오히려 돕고자 한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 정책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의 양극화문제는 다분히 인재(人災)에 가까운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동반발전에 역행하는 거시경제정책사례

#### 1)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 안 된다?

수출 대기업이 수출해서 번 돈을 내수에 투자할 수 없게 막아놓고 동반성장 안 된다고 고민한다.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이 같은 업종이나 혹은 여타 국내 서비스업에 투자할 수 없게 수도권규제나 기타 경제력집중규제로 막거나 혹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니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과도하게 늘어가고 수출로 번 돈은 해외로 유출되니 수출과 내수는 같이 동반성장 못하는 것이다. 국내 좋은 일자리가 해외에 수출되니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 결혼도 미루고 결혼해도 맞벌이 해야만 하니 저 출산은 심화된다. 능력 있는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늘지 않으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양극화도 심화된다. 내수산업에 불리한 정책을 쓰면서 내수, 서비스업 키운다 하니 연목구어가 된다.

#### 2) 대기업의 수익은 급증하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다?

수출 늘린다고 고 환율정책 지속하면 내수서비스업 등 내수부문과 내수 중소기업은 어렵고, 제조 수출대기업은 유리하다. 더구나 이미 지적인 대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더 어려워진다. 또한 고 환율정책을 고집하면 수입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결국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 수출대기업, 혹은 수출부문의 성장을 위해 내수 서비스부문과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국내인플레이션을 조장하여 서민경제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3. 동반발전에 역행하는 경제제도 정책 사례

#### 1) 대기업규제 하면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중소기업 위한다고 대기업 특별 규제하면 대기업은 해외투자 늘리고, 수출과 내수의 연계는 더 약화되어 국내 중소기업과 내수산업만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는 해외로 뺏겨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대기업규제가 중소기업 어렵게 만들고 청년들 어렵게 하는 결과 초래한다.

#### 2)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얻지 못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애쓰지만 무주택 영세계층만 어렵게 만든다.

일 가구 일 주택 장려정책으로 다 주택 소유에 세금폭탄을 매기고, 임대사업자도 돈은 벌지 말고 임대업을 하라 하니 임대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결국은 주택 살 능력 없는 월세, 전세 수요자만 피해보게 된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려면 전월세 임대업이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익은 내지 말고 임대서비스만 열심히 하라는 이상한 정책을 한다.

#### 3) 30년 넘게 수도권규제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30년 넘게 수도권에 대기업 입지 못하게 하니 대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수도권도 어렵고 지방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결국 일자리를 해외에 팔아먹는 일을 하면서 일자리 늘릴 정책 찾는다고 고생한다. 모두다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역균형발전 한다고 야단이다.

발전은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이나 산업부문, 기업에 집적되는 과정인데도 자원, 산업, 기업, 공항, 축구장, 공공기관, 도시를 전국에 골고루 분산, 배치시키는 정책을 30년 넘게 지속하고 있어 국토의 경쟁력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지역 간 상생, 동반은 고사하고 모두가 동반 하락하는 형국이다.

**4) 중기육성정책이 중기에 독이 되었다.**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가진 애를 쓰는데도 지난 30여 년간 반듯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기가 거의 없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걸 대기업 때문이라 하여 대기업규제를 더 강화하면 대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니 중기와 대기업 상생은 더 어려워진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역 차별하는 획일적 1/n지원정책이 앓은병이 중기 생태계를 만들어냈다.

**5)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이 근로자에 독이 되어 돌아온다.**

근로자 위한다고 노조를 무소불위의 전투적 노조로 키워놓으니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꺼리니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된다. 비정규직 저임금 청년들은 결혼할 엄두도 못 내고, 결혼해도 맞벌이 안하고 살길이 없으니 애를 낳기는 더 어려워진다. 양성노조가 득권세력이 되고 신규진입 비 노조는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젊은 세대의 미래는 더 불안해지고 출산율도 떨어진다. 근로자 간에도 동반성장이 안 된다.

**6) 교육격차를 없애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평준화 교육은 오히려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킨다.**

평준화 교육으로 공교육이 무너지니 이제 사교육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결국 부유한 학생들은 좋은 학원 가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학원 갈 길이 없어 결국 가난한 학생들만 피해보는 결과 가져온다.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은 고착화되고 동반성장은 더 어려워진다.

**7) 선진국 복지제도 따라하면 동반성장하는 선진국 된다?**

동반성장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진정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인지 고민 않고 선진국이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고 있으니, 도덕적 해이를 초래 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무

상복지는 가장 비싼 복지이며, 획일적 복지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 동기부여기능이 없는 복지제도는 복지수혜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도우려는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복지수혜자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 8) 50m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앓은뱅이 축구규칙은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

잘하는 선수를 규제하는 축구규칙은 모든 선수를 앓은뱅이 선수로 만든다. 유능한 거포 선수들은 해외로 나간다.

국가나 정부, 정치권이 계속해서 부자는 싫고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계속 가난한 사람만 우대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기업은 싫고 중소기업만 사랑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싫고 지방만 사랑한다고 하면? 포퓰리즘의 결과는 ?

사랑받고 우대받는 주체는 늘어나서 번창하고 싫어하는 주체들은 줄어든다. 경제제도가 특정 조건하의 주체들에게만 유리하게 조성되면 세월이 가면 대접 받는 주체들은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주체들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지방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와준다고 하면 모두다 그 상황에서 안주하게 된다. 무엇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대접받을 조건이 되면 기득권이 되고 안주하게 된다. 자조하고 노력하여,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주체가 대접받도록 동기 부여하는 장치가 없으면 좋은 뜻이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 II. 바람직한 동반성장, 공생경제모형?

### 1. 부문 간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고려않는 정책이 양극화를 조장한다.

이상과 같은 실례들은 그 동안의 잘못된 경제관과 그에 따른 잘못된 정책선택에 연유하고 있다. 경제는 분해해서 볼 수 없는, 전일적으로 봐야하는 복잡현상이다. 모든 부문이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문만을 따로 생각하는 정책은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수출과

내수부문, 중소기업과 대기업부문, 제조업과 서비스업부문,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등은 모두 서로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느 한 부문이 타 부문을 “착취”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사고는 종합적 사고가 아닌 환원주의에 빠져 부문 간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중소기업을 (확실적으로) 키우고 동시에 대기업을 묶어놓으면 기업생태계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균형은 하향평준화의 죽은 균형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의 수요가 일어날 것이며, 중소기업이 혼자 투자를 늘리면 누가 그 제품을 소화해줄 것인가? 수출과 내수를 잇는 투자주체로서의 역할은 투자할 자금이 있는 기업만이 할 수 있는데 투자능력이 있는 주체를 묶어놓으니 수출과 내수의 네트워크는 약화되게 되는 것이다. 매사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은 싫어하고 투자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워지고 명색이 일자리 늘린다는 선심정책은 난무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동반발전은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인 경제제도와 거래비용문제를 고민함이 없이 현상만을 보고 대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통해 결과를 교정하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역공한다. 시장은 ‘경제 비효율과 정체’라는 무기로 경제주체들에게 그것도 바로 돕고자 원했던 경제주체들을 어렵게 만든다. 대중적 규제효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동반하라고 강제로 묶거나 재분배시키면 자생적 상호작용성향은 커지지 않고 1+1이 2도 아닌 1이나 0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된다. 왜 동반성장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지 그 원인과 이치를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런 작업이 결여된 대중적, 단순 결과교정 재분배조치는 거래비용을 높여 경제주체들을 어렵게 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려 오히려 도우려는 취약계층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부문들을 서로 대립적으로 보는, 즉 한 부문이 커지면 타 부문이 약화되는 관계로 보는 기계론적 환원주의 경제관에서 탈피해야 한다.



홍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홍하는 이웃이 있어 모두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 창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발전, 창발할 수 있어야 모든 부문이 동반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 2.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동반, 공생은 자본주의 경제에 내제되어있다.

1+1>3 이 되는 메카니즘은 우주안의 모든 열린 시스템의 변화의 본질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닫힌 시스템은 결국 소멸한다했다. 1+1>3인 비선형적 상호작용이 시스템의 소멸을 막는 장치이다. 경제는 복잡문화계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물이해가 자본주의 모순론, 착취론 등을 만들어내었다. 자본주의 경제는 홍하는 이웃이 홍하지 않는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홍하지 않는 이웃이 홍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를 착취(무임승차)하여 동반성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홍하는 이웃은 영원할 수 없으나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는 존속하게 된다. 홍하는 이웃은 끝없이 무임승차당하며 후발자들에게 시너지를 제공하고 사려져간다. 후발자가 선발자의 자리를 이어간다. 같아지지는 않지만 동반성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진화는 이렇게 이어진다.

동반성장은 그래서 시너지의 원천인 홍하는 이웃들의 출현을 격려하는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홍하는 이웃들을 폄하하면 홍하는 이웃들은 늘어나지 않는다. 아무도 홍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들을 격려하여 온 사회에 동기부여 하는 국가만이 동반성장을 누릴 수 있다. 홍하지 않는 이웃은 측은하다고 예뻐하고 홍하는 이웃은 동반성장에 해가된다고 폄하하면 사회는 홍하지 않는 이웃으로 가득해 진다. 동반 몰락의 길이 있을 뿐이다.

### 3.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다. 국내 투자의 장애요인들을 걷어내야 동반성장, 공생경제 가능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경제라 하기보다는 기업경제라 해야 할 정도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삶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기업조직에 일터를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는 독특한 체제이다. 잘하는 기업이 늘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면 동반성장하고 삶이 윤택해지고 기업이 없어, 혹은 있어도 일자리 늘리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생기고 모두 어려워진다.

기업의 국내투자를 막는 여하한 정책도, 그 명분이 어떠하던, 양극화를 조장하고 동반성장을 막는다. 수출대기업이 국내투자 않으면 국내 내수기업이 어려워지고, 대기업이 투자 않으면 부품 증기는 어려워지고, 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하면 젊은 혁신가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이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면 일자리는 늘지 않고 양극화는 조장되고 동반성장, 공생경제는 어려워진다.

#### 4. 국내투자를 막는 이념과 정책들

1) 자본주의 모순론에 사로잡혀 흥하는 경제주체는 청산해야 한다는 이념과 정책들: 부자와 대기업은 무조건 세금 많이 내야 당연하고 폄하하고 규제해도 좋고, 빈자와 중소기업은 어렵기 때문에 세금면제는 물론 무조건 도와야한다는 생각과 정책

=>국민 모두의 동기를 차단하여 모두 망하게 만드는 결과 초래.

2)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은 나쁘고 대기업규제는 당연하다는 생각.

=> 대기업의 해외투자 조장, 일자리 해외수출 조장

3) 중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도와야한다는 생각.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천국 초래. 대졸자 천국인 대한민국의 높은 비전의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초래.

4) 자본주의 착취론에 사로잡혀 노조는 절대선이라는 생각

=> 무소불위의 전투적 강성노조를 만들어내고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결과 초래. 노조의 존립근거는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론에서 왔다. 자본주의가 모순된 체제인가?

=>기업들의 국내투자기피와 해외투자 조장, 일자리 수출

- 5)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인 차등, 차이, 격차가 싫다하여 이를 없애면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은 차단되고, “당분간의 행복으로 영원한 불행을 사게 된다.”
- 6) 반 부자, 반 대기업, 반 수도권, 반 일류 정서에서 벗어나야 모두가 부자, 대기업, 선진도시, 일류로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동반성장, 공생경제가 가능해 진다.
- 7)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동기부여 하는 사회는 동반성장하지만 역으로 경제적 차이, 차등, 집중을 막아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동기부여를 차단하여 모두 동반 추락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 3. 동반성장의 철학, 정책, 기업의 대응과 미래 발전 방향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A. 기업생태계 변화

##### 1) 기술변화의 가속화, 융합화

- 기술의 융합, 제품과 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융합
- 산업간 융합화로 인해 가치사슬의 재구성
- 가치사슬 내 역할의 변화와 경쟁의 틀 변화  
시장간 경쟁, 기업군간 경쟁, 기업생태계간 경쟁
- 기술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Technology Road Map의 복잡화
- 개별 기업의 기술개발 -> 기업생태계 기술협력

##### 2) 새로운 인터넷 패러다임의 등장

- 1990년대 포털(Yahoo)
- 2000년대 검색 (Google)
- 2010년대 소셜 모바일 플랫폼 (Apple, facebook)
- Open Platform 참여 인센티브 경쟁으로의 변화
- 다양한 생태계 형성 펀드의 등장  
2008년 3월 Apple 단독으로 i-Fund 결성 ( 2억불)  
Facebook, Amazon 등 s-Fund 결성 (2.5억불)  
JP Morgan Social Media Fund (12억불)

##### 3) 전세계적 개방화 네트워크화

- My Space -> Our Global Space
- 외교는 외교관이 한다?  
(선교사, 유학생, 한류 드라마, K-pop 등)

### 3. 동반성장의 철학, 정책, 기업의 대응과 미래 발전 방향

- 국가브랜드 vs 기업브랜드
- Virtual Nation: SM Town, 아이폰 생태계
- 세계적 산업구조의 변화: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컨텐츠와 서비스 경쟁력이 중요
- 핵심개념: Platform/ Open/ Network/ Collaboration

#### 4)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적 요구와 참여

- 2011년 제스민 혁명과 영국 폭동 등의 의미
- 기술혁명으로 인한 자원 소비 면에서 사회적 평등화
-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로 인한 동조화
- 참여적 행동적 민주주의 물결  
확실한 자기 의사 표시, 방관자가 아닌 주도자의 역할  
타인을 위한 헌신적 기여 의지
-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나가수, 청춘콘서트, ...
- Naver 지식 iN, 참여식 사례수업, 소비자의 참여, ...

## B. 기업생태계의 변화: 불균형성장에서 공생발전으로의 변화

### 1)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변화 요구 (자본주의 4.0 시대)

- 자유방임 자본주의 -> 수정자본주의 ->자유시장자본주의
- 칼레츠키(Kaletsky, A., 2010)
- 신자유주의가 많은 사회적 문제 야기
-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 (정부 주도 발전의 한계)
-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
- 기업경영형태를 이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 시도  
(비영리조직, 공기업, 사회적 기업)
- 시장기능을 중요시하되 기업 등 시장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중시
- Back to the Basic: 1891년 로마교황청 발표 '새로운 사태'

### 2)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 3. 동반성장의 철학, 정책, 기업의 대응과 미래 발전 방향

- 규모의 경제(원가) -> 스피드 경영 -> 차별화 경영 -> 생태계 경영
- 경쟁과 협력의 조화를 통한 기업생태계의 구축의 책임
- Time Horizon: 단기적 주주이익에서 장기적 주주이익으로
- 주주가치, 종업원가치, 공급업체가치, 고객가치, 사회적 가치의 연계
- 한국경영학회 미래경영키워드
  - \* 공유가치(shared value) 경영
  - \* 다양성 포용(diversity-embracing) 경영
  - \* 진정성(Authenticity) 경영, 의미경영
- 경영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종태, 2011)
  - \* 사회진화론적 경영시스템 패러다임
  - \* 사회적 가치창출 패러다임
  - \* 초월적 융복합 패러다임
  - \* 자유공동체 패러다임
  - \* 인적 사회적 자본 패러다임

### C. 정부의 시각 변화

- 불균형 성장구조의 고착
  - \* 수출 vs 내수, 대기업 vs 중소기업, 전통산업 vs 신산업
- 양극화 문제:
  - \*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 단절
  - \* 소득 양극화 및 일자리 양극화
- 상생협력, 동반성장
  - \* 대기업 협력없이 중소기업문제 해결 불가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긴장관계
- 정부의 기업에 대한 기대
  - \* 상생협력을 넘어선 차원
  - \* 체제 리스크 차원
- 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통합

## D. 동반성장 정책

### 1. 동반성장의 의미

#### 1)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 '분배와 성장' vs '경쟁과 협력'
- 협력없이 성장없고 갈등없이 분배 없다  
(성장속에는 분배있고 분배속에는 성장없다)
- 참여정부: 정부주도 시혜적 협력
- MB정부: 제도 + 사회적 합의

#### 2) 경쟁과 협력의 조건

-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메카니즘에서 협력은 쉽지 않음
- 경쟁의 조건: 공급자 수/ 제품 차별성/ 핵심능력/구매 빈도
- 경쟁의 코스트는 거래비용 (불신으로 발생)
- 약속(Commitment)과 의존성(Dependency): 빛과 그림자
- 협력관계와 경쟁관계: 약속의 크기, 지속성에서 차이
- 협력관계: 거래의 내부화와 외부화 사이의 원가효익적 선택
- 신뢰의 유형
  - \* 계약적 신뢰(contractual trust); 계약내용에 대한 수행의지에 대한 믿음
  - \* 역량 신뢰(competence trust); 약속 이행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 \* 선린의 신뢰(goodwill trust):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 협력의 유형
  - \* 엘리트 서클형: 수직적 관계이면서 폐쇄적인 경우
  - \* 혁신 센터형: 네트워크의 구조는 수직적 관계를 갖지만 네트워크는 개방적
  - \* 혁신 공동체형: 네트워크가 수평적이면서 협력관계가 개방성을 띄는 경우
  - \* 컨소시엄형: 네트워크가 폐쇄적이면서 네트워크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가 수평적인 경우

### 3) 동반성장의 조건

- 대기업의 가치체계
- 협력업체의 차별화
- 동반성장의 실천수단
- 임직원의 기여도 평가

## 2.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효과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자의적 납품대금 감액 및 구두발주 방지
-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2차 이하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확대
- 대형유동업체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 2)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필요

- 중소기업적합업종 문제
- 2-3차로의 확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공공기관의 역할강화

### 3)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지원

- 경영선진화와 구조개선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성장역량 강화
- 인력, 자금 등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 산업단지 환경 개선

### 4) 지속가능한 추진 점검 체계 구축

- 동반성장위원회 등

## 3. 동반성장지수와 적합업종제도

### 1) 동반성장지수



- 도입 경위
-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 평가  
(협약의 충실도, 협약내용 이행도, 하도급법 위반 등)
-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공정거래, 협력, 동반성장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 제도 적용의 기준  
최소 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종사자 비중, 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 수출비중
-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사항  
매출액 대비 R&D 투입 비중, 경쟁력 수준,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 진입자제 및 사업이양 적용대상 대기업의 범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단, 기업생태계를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도 탄력적 적용
- 제도의 의미:  
기업생태계 실태 파악, 객관적 자료 확보, 전문가 양성기회, 대중소기업의 소통과 이해의 장

### 4. 기타

#### 1)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 실무위

- 기존의 대·중소기업간 성과배분제도  
(원가연동제, 단가인하제, 성과공유제 등)
- 이익공유제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제 개발

#### 2) MRO 사업 실무위

#### 3) 전문인력 실무위

## E.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 1. 기업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성찰

- 기업이 이익을 내면 누가 행복한가?
-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 어떤 기업을 국민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 다른 글로벌 기업과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는가?

### 2.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 선포와 조직변화 노력

- '파트너쉽경영', '동반자시대', '존경 받는 기업으로',....
- 존경 받는 기업은 성과중심기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 왜 동반성장이 필수적인 전략인지?
- 협력기업을 어떻게 차별화 할 수 있는지?
- 동반성장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 임직원들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 동반성장 모델은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고 확산가능한지?

### 3. 업종별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특성

- 일방적 지원사업:
  - \* 납품단가 신속조정 (자동차 부문)
  - \* 협력업체 활동지도 (기계부문)
  - \* 협력업체 투자자금 지원 (석유화학부문)
  - \* 협력사 전문인력 양성지원 (소프트웨어부문)
- 엘리트서클형
  -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조선부문)
  - \*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등 성과공유제 (철강부문)
  - \* 기술협력을 통한 장비 국산화 (디스플레이 부문)
- 컨소시엄 협력
  - \* 업체별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섬유부문)
  - \* 핵심장비 공동개발 (반도체 부문)
  - \* 유통제조 브랜드 공동표기 (유통부문)

#### 4. 기업의 대응과 과제

##### 1) 삼성

- 협력사 평가: 1차 협력사 평가에 2-3차 지원내용 포함  
우수 2-3차 협력사 1차로 전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MRO 업체 IMK(아이마켓코리아) 매각 결정

##### 2) 현대자동차 그룹

- 원가상승 납품가 반영, 해외동반진출, 경쟁사 납품 허용

##### 3) CJ

- 적합업종
- 유통망을 중소기업을 위한 오픈 플랫폼으로 활용

##### 4) 백화점협회 롯데쇼핑

- 백화점 업의 개념 재 정의 필요
- 오픈 플랫폼으로의 매장, 중소기업 인증 평가

##### 5) LS

- 파트너쉽

##### 6) K Water

- 통합 온라인 정보시스템

##### 7) MRO

- 오픈 플랫폼으로 재 정립
-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대기업과 연결시키는 동반성장모델

##### 8) 여신금융협회

- 소상공인신용대출직거래장터

9) 포스코의 성공적 동반성장 프로그램 (65개)

- \* 파트너를 안심시키는 현금결제 및 금융지원
- \* 공동의 가치창출을 위한 기술협력
- \* 개선을 통해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
- \* 취약부분해소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 \* 거래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문화 정착
- \* 강건한 기업생태계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확대

우리 사회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주어진 틀을 과감히 넘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담대한 제안을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